

## 동북아 R&D허브 - 끝없는 논란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I. 사치인가, 생존논리인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과 경제특구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것은 물류 아니면 금융 또는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센터 유치 개념이 강했다. 이런 와중에서 그럼 ‘연구개발 허브는 안되는가’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처음 연구개발 허브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연구개발 허브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솔직히 많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기술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엔 세 가지 측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오기론’이었다. 금융·물류허브를 한다면 연구개발 허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기가 그것이다. 사실 금융이나 물류허브가 연구개발 허브만큼 어렵다고 보면 이를 하겠다는 판에 연구개발 허브도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자기 최면론’ 내지 ‘자기실현 효과’에서였다. 너무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만 목표라도 1등을 하겠다고 내걸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10등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국내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들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아예 글로벌 스탠더드의 허브를 하겠다고 나서다 보면 정작 허브는 못되더라도 국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생존론’이었다. 연구개발 허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동북아 분업구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위치가 아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런데 이런 ‘오기론’ ‘최면론’ ‘생존론’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허브 중 왜 연구개발 허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오기론’은 ‘과연 금융허브의 실현이 가능할까’, ‘물류허브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까’등을 따져보면 사실 ‘오기’라기보다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면론’이란 것도 어차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허브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신기술, 신산업을 통해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보면 ‘생존론’은 우리 경제의 진로를 말해준다.

연구개발 허브가 결코 사치스런 말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이쯤 되면 분명해진다.

## II. 경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사실 ‘연구개발 허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무역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물류허브’들을 부상시켰다.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금융허브’들을 부각시켰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우리는 ‘연구개발의 세계화’를 목도하고 있다.

세계 어디든 필요한 연구인력이 있고 연구환경이 좋으면 기업들은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려고 든다. 이런 흐름을 리드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이다. 특히 전자, 제약 등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해외 투자가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새삼스런 사실도 아니다.

OECD는 이런 추세를 간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기술 디바이드 축소’, 달리 표현하면 ‘기술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개발허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등장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세계적 ‘연구개발 허브’로 부상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는 극명했다.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집결하는 곳은 세계적인 신기술의 창출지로 부상했다. 그리고 새로운 부(富)를 창출했다. 오래 전의 도시국가 시절을 연상시키기도 하듯 국가 내의 지역거점들간 희비도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금 기술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예외없이 혁신거점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스웨덴의 시스타, 또 핀란드의 울루 등은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눈치를 챘다. 이 때문에 과다 투자시비가 일 정도로 매력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가 연구개발 허브를 얘기하기 전부터 ‘연구개발 허브’ 경쟁은 이미 가열되고 있었던 것이다.

## III. 동북아 新분업의 열쇠는?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한다. 2020년엔 이 비중이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을 할 것인가?

여기서 방향을 잘못잡기라도 한다면 전략적 요충지라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처럼 가다간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너트-크랙트(Nut-cracked) 될 것이라며 말들도 많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의 주력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 근 교수는 “한중일간 무역구조에서 ‘산업 내(內) 무역’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업A는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고, 산업B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식의 전통적 관점보다 어떤 산업이건 해당 산업 내(內)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서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생산’일까 ‘물류’일까 ‘금융’일까?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생산공장의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산’은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일부 高부가가치, 高기술 생산까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럼 ‘물류’는?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는 너무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5천만 명이 먹고살지는 못한다. 물류거점인 네덜란드나 싱가포르도 물류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물류의 GDP창출효과는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의 물류산업의 GDP 기여도에 대한 통계치를 찾아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하곤 놀랄 것이다.

그럼 ‘금융’인가?

금융허브가 된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산업을 포기해서라도 금융으로 5천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발전경로나 기반도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외국 금융은 뭔가 불리한 변화라도 생기면 언제든 떠난다. 충성도가 낮다는 얘기다.

아예 세금을 없애서 이들을 데려 오겠다는 것도 어렵다. OECD의 ‘유해한 조세경쟁 방지’ 때문이다. 이미 금융거점을 구축한 선진국들의 견제도 심하다.

금융 주창론자들은 물론 이렇게 말한다. 산업은 어차피 중국 때문에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이 잘되면 산업도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문제도 많다. 중국이 모든 산업을 그것도 산업 내(內) 모든 부가가치 사슬을 장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이 잘돼서 산업도 강한 나라가 있을까. 영국을 예로 들지만 영국은 지금 산업경쟁력 문제로 골치다. 그럼 미국인가, 미국은 전제조건이 우리와 같지가 않다.

그럼 뭔가? ‘연구개발’ 이것은 어떤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된다. 중국으로부터 달아나는 길은, 아니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넘어야 할 벽이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넘자는 건 아니다. 어차피 그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몇몇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우위를 점하자는 얘기다.

정보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주장이고 보면 희망은 분명히 있다. 적어도 일본이 우리를 공동연구 파트너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동북아 분업구조이고 생존의 길인지 모른다.

한편 이런 기능들을 두고 물류, 금융, 연구개발 등의 ‘복합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얘기다. 어디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 모든 것이 ‘복합’이다.

그런 점에서 ‘단일 중심’이나 ‘복합 중심’이나의 논쟁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

#### IV.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끝없는 논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정작 이 문제에 발이 묶여 있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용어부터가 혼선이다. 우리가 ‘중심’이면 다른 나라는 ‘변방’인가?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의 이런 표현에 거부감(좋게 말해서 거부감이고, 내심으로는 웃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아마도 동북아 경제권에서 어떤 세계적 비교우위를 확보, 新분업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 적당한 용어를 찾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접근방식과 관련한 논란이다. 그것도 입지문제를 놓고 말이다.

지금 각 부처에서 들고 나온 것들을 보면 헛갈리기에 딱 좋다. 재경부는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를, 산자부는 혁신클러스터를, 과기부는 R&D특구를, 또 건교부는 ‘OO首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경제특구만 생각해도 그 출발할 때와 달리 이제는 전문가들조차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경제특구와 관련해 처음에 제기됐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특구라니’ 라는 비판에 대한 논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비판을 제기하는 쪽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라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체제와, 우리가 하려는 사업간에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특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구는 정상적인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는 얘기다.

반대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불균형적 ‘빅-푸시(Big-push) 논리’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사해 온 성장전략이라든지 현실적 측면 등을 생각하면 이것이 결코 부자연스런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인다.

일단 이 논쟁에서는 후자가 대충 이긴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특구에 부여하기로 했던 각종 ‘인센티브’랄까, ‘메리트’가 도대체 뭐지 헛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단체, 교육단체, 그리고 비특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한 탓이다.

만약 ‘무규제’ ‘무노동’ ‘무세금’과 거리가 먼 특구라면 더 이상 非특구와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 이리되면 특구를 발판으로 장기적으로 전국을 특구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소위 '상향평준화' 희망도 사실상 사라진다. 정반대로 '하향평준화'가 되어 버릴 위험이 커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혼란에 크게 기여(?)했다.

이 뿐이 아니다. 인수위는 특구에 '국내기업 先조성론'을 들고 나왔다. 국내기업이 먼저 조성돼야 외국기업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무슨 기능을 중심으로 하느냐를 두고 헛갈리게 하더니 누구를 유치하느냐를 두고도 헛갈리게 만든 것이다.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니 참여정부 출범의 지지세력이 반발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별 인센티브를 안 주자니 외국기업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대신 국내기업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당연히 제기됐다.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란 정책목표가 이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추구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특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현재 기능 문제는 '복합론'으로, 유치대상은 국내외 기업으로 대충 봉합을 한 것 같지만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언제든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의 특구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인천 송도를 IT 및 R&D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대덕 연구단지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유증도 만만찮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들고 나왔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구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마찰이란 논란은 없었다. 아마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서구의 각종 혁신거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역시 자생적이거나 '민간 주도적'인 서구와 달리 '정부 주도적'이란 점에서 서구와는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점에서 '특구적 발상'과 별반 차이가 있을 것도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산업혁신 클러스터는 종래의 '공업입지' 개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고,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자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지역산업 육성책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살펴본 경제특구와 뒤에 나오는 'R&D특구'와 결코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에서 헛갈림은 더해만 간다.

R&D특구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이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에 맞서 'R&D수도'를 내세우기도 했다.

어쨌든 민주당은 R&D특구를 몇 군데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후 별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 경제특구에 R&D 거점 얘기가 나오자 대덕이 즉각 반발한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대체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는 얘기가 있다. 일부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대덕의 항변에는 생각해 볼 대목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정부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될 성질의 일이라면 대덕이 30년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니 말이다.

어쨌든 이 때문에 R&D특구 문제가 다시 이슈화됐다. 과기부가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헛갈림은 더해 갈 가능성이 높다.

건설부도 옛날부터 지역별로 ‘OO首都’를 얘기해 왔지만 이 또한 가세하면 정말로 헛갈리게 돼 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다.

‘리더십의 부재인가’ ‘정부주도의 한계 봉착인가’. 정부부터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통신망’ 건설에만 몰두한 채 정작 그 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중요한 ‘콘텐츠’는 놔두고 있는 꼴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정부 주도의 각종 특구 및 혁신거점 조성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번듯한 외양의 ‘물리적 집합’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아직도 터지지 않은 하이테크 버블’이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새겨들을 만한 얘기다.